담양군수 재선거 첫주말, 이재명 등판… 정권심판 띄웠다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이후 첫 주말
30분 연설, 30분 뚜벅이…담양 누빈 '이재명'

"담양 전국화, 나라 정상화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요."

4·2담양군수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전남 담양을 찾아 1시간 남짓 연설과 전통시장 '뚜벅이 유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담양 중앙공원에서 열린 이재종 담양군수 재선거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 30분 가까이 마이크를 잡았다.

유세장 주변은 이 대표 도착 30여분 전부터 유세 분위기로 후끈 달아 올랐다.

유세장과 불과 수십m 떨어진 곳에서는 맞대결 상대인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의 맞불 유세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중앙공원 사거리에는 손팻말을 든 선거사무원들이 배치돼 연신 '기호 1번'을 외쳤고 이 대표를 보기 위한 인파도 곳곳에서 몰려들었다.

이날 집중 유세에는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호남을 지역구로 둔 5선 박지원, 4선 이개호, 주철현·양부남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이재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선 담양 전국화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담양의 훌륭한 관광 자원을 이용한 진흥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앙 정치와 담양 군정을 연결하는 인물이 이재중 후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것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담양 군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과 내란 극복 의지를 믿는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새로운 민주 정당으로 변모하겠다. 이 후보를 선택해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유세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자당 후보의 손을 맞잡고 '이재종 만세' '민주당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연설이 끝난 후 이 대표는 400m 가량 떨어진 전통시장으로 이동해 도보 유세에 나섰다. 상인들은 갑작스러운 이 대표의 등장에 놀라면서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와 함께 상인들을 일일이 찾아 악수를 하거나 상인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한 상인은 간식을 건넸고 또 다른 상인은 담양 대나무로 만든 효자손을 선물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시원한 곳을 긁어드리겠다"고 재치있게 화답하기도 했다.

"담양을 위해 잘 뛰어 달라"는 격려의 말도 이어졌다.

이 대표 측은 테러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호에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 후보는 30분 가까에 시장 상인들과 소통한 뒤 차량편으로 상경했다. /뉴시스

이재종 담양군수 재선거 후보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전남 담양군 담양중앙공원 이 후보의 지원 유세장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24일 한덕수·26일 이재명·다음 尹?… '운명의 사법위크' 정국 격랑 예고

한총리 계엄 관련 고위공직자 첫 판단… 윤 탄핵 여부 가늠자
이재명 2심 뒤 윤 탄핵 선고 가능성… 결과 따라 정치권 요동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르면 이번 주 중후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달 19일 1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의 결론으로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의 첫 판단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한 총리는 파면되지만 기각·각하될 경우 곧바로 복귀하게 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이 중 '내란 공모'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틀 후인 26일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인터뷰 가운데 '해외 출장 중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발언을 유죄로 봤다. 또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 발언으로 판단하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최종 변론에서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아울러 선거법 제265조의2 항에 따라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1·2·3심 재판은 각각 6·3·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이 대표의 유무죄를 확정해야 한다.

특히 이번 항소심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1심에 이어 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다면 민주당 내 '이재명 독주 체제'에도 균열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을 중심으로 '플랜 B'(대안)를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여권은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점쳐진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전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6일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역대 최장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4월 초중순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시스

세비 받고 후원도 있는데 투잡 뛰는 지방의원들 왜?

이해충돌 우려 큰 지방의원 겸직… 허울 뿐인 신고 제도
대리 경영·품앗이 등 음성화까지 '제 식구 감싸기' 급급
세비·후원금 제도 '의정활동 전념' 방점… 허약한 풀뿌리
"의원 존재이유 자기입증" "정치문화 개선에 앞장서야"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인 지방의원들이 본연의 의정활동과 사익 간 이해충돌 우려가 큰 이른바 '투잡'을 뛰고 있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겸직 제도의 허점을 비집고, 의원 직위를 이용한 무분별한 영리 활동도 펼쳐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선을 넘고 있다.

이제는 의원들 스스로 투철한 공직관을 확립하고, 혼탁한 금권 선거에서 벗어나 정치 후원 문화의 선순환이 안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투잡 뛰는 지방의원들…구멍 난 겸직 규제

23일 광주시의회·5개 구의회에 따르면 광주 지역 광역·기초의원 92명 중 절반이 넘는 53명(57.6%)이 99건의 겸직을 신고했다. 이 중 절반가량인 26명(37건)은 겸직하고 있는 업체 등지에서 따로 보수까지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연의 의정 활동과 사익 추구 사이의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사례도 있었다.

의장이 운영하는 업체에 공공기관의 특정 사업을 따내고자 동료의원이 취업해 발 벗고 나서거나, 의원 재임 기간 중 취·창업하는 사례도 있었다.

의원 유관 사업체는 관할 지자체 또는 산하기관 발주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는 등 규제가 있긴 하지만, 현행 겸직 제도에는 허점이 분명하다.

기초의회의 경우, 의장에게 신고만 하면 겸직이 가능하다. 신고만 하면 오랫동안 유지해온 본업인지, 의원 직위를 이용한 영리 활동 우려가 큰 당선 이후 취·창업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의회 내에서 이해충돌 가능성 등 적절성에 대해 심의하거나 사임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의장의 재량에 달렸을 뿐이다.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사문화(死文化) 조항일 뿐이다.

겸직하는 사업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보수를 얼마나 받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신고하는 의원 개인의 양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신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신고조차 하지 않은 지방의원들의 편법적인 사업체 대리 경영 또는 품앗이 영리 활동 등 음성적인 겸직 행태도 문제다.

현직 북구의원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자신이 실질 경영한 업체가 구청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하다 적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향 선배가 대표로 있는 전산업체의 장비 구매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독려하며 영업 행위를 하거나, 겸직 신고 규정을 어기고 자신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승진 화환 등을 판촉한 의원들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의원들의 무분별한 겸직·영리 행위에 제동을 걸 제도적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각 지방의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정치 지형에서 얽힌 이해관계와 정치 셈법 탓에 자정 작용도 기대하기 어렵다.

'제 식구 감싸기' 탓에, 최근 5년새 파문이 일었던 광주 지역 지방의원 겸직 위반 사례 대부분이 의회 내 공개사과 등 솜방망이에 그쳤다.

일각에선 지방의원 관련 사업체는 해당 지자체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만큼, 다른 지자체 의원과 이른바 '품앗이' 영업·사업 수주 활동까지 벌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이러한 선 넘은 의원들의 '투잡' 행태에 제동을 걸려면 겸직 신고 제도의 체계적인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방의원들이 겸직 신고 제도의 취지조차 이해조차 못 하고 있다. 매달 세비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의정 활동보다도 영리 추구에만 연연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직무유기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무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고 정도에 그치는 각 의회 윤리자문위원회 활동을 강화, 의원들의 무분별한 겸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분기 또는 반기별로 반드시 겸직 사실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의회 안팎에서 견제 기구를 둬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세비·후원금 받는데 왜…문제는 '허약한 풀뿌리'

지방의원의 영리 활동은 선출직의 지위·권한을 부당 이용하거나 본연의 의정활동을 저해할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존한다.

때문에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초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에게도 세비를 지급하는 등 안정적 생계 기반을 마련해 이해 충돌·부패에 취약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 왔다.

광주 기초의원은 지난해 기준 월정수당·의정활동비로 매달 381만원~421만원씩을 지급받고 있다. 각 의회마다 사정은 다소 다르긴 하지만, 해마다 5000만원 안팎의 세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의정비 인상 논의 때마다 의원들은 "장애인·청년 등 생계취약계층의 정치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 "의정 활동에 전념하려면 세비 보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불투명한 의원 겸직 활동에 대한 허술한 규제, 의정활동 평가 제도 부재 등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지방의원들의 공·사가 불분명한 겸직 영리 행위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 지방의원들도 합법적이고 투명한 선거 자금을 조달할 길도 열렸지만, 실제 후원회 개설은 극소수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23명 중 6명 만이 후원회를 결성했다. 기초의회의 경우, 북동·서·광산구의회에서 각 1명씩에 그쳤다. 회계 책임자 상근직 채용 등 운영 경비 부담이 크고, 지방의원 후원금 기부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한 정당 관계자는 "시기상조일 수는 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배한 게 엄혹한 현실이다. 의원들 스스로 정치적 효능을 입증해 보여야만 의정비도 현실화할 수 있고 건전한 후원 문화가 정착할 수 있다"면서 "결국은 의원들 스스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지방의원은 "부정하고 음습한 겸직, 영리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세비와 후원금 만으로도 건강한 풀뿌리 정치가 가능하도록 문화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현실 정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부터 배척해야 한다. 경조사비·찬조금 등 구태의연한 관행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야, 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더 깨끗하고 나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